

# 한일회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 한일회담 연구사의 궤적: 2006년~2025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엄태봉 \_ 강릉원주대학교 조교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한일회담 연구의 태동화: 2005년까지의 시기
- III. 한일회담 연구의 활성화: 2006년~2015년 시기
- IV. 한일회담 연구의 사양화: 2016년~2025년 시기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이후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일회담 연구사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2006년~2015년 시기의 한일회담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연구자료집 출간,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 내용의 정치화(精緻化), 연구 주제의 다양화, 연구 결과의 심화 등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둘째, 2016년~2025년 시기의 한일회담 연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연구 성과와 연구 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향후 한일회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틀을 통한 연구, 일본 정부 공개 문서 중 아직 번역·출간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작업, 일본 정부의 부분 공개·미공개 자료의 전면 공개,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 1. 머리말

본고는 2005년과 2007년 한일 양국이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한 이후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이하, 한일회담)을 다룬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은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60년간 우호와 갈등, 협력과 대립이 교차하는 길 위에서 마주하며 지금까지 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그 시작점은 바로 한일 국교정상화였다.

한일 양국은 1945년 8월 15일 각각 해방과 패전을 맞이하면서 제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한동안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로 인해 발생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주권 국가 간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1951년 10월 말부터 한일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양국은 식민지 지배 관계의 불법성 유무를 논의한 ‘기본관계문제’, 일제강점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문제를 논의한 ‘청구권 문제’,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출토 유물의 반환 여부를 논의한 ‘문화재 반환 문제’, 일본에 있는 조선적(朝鮮籍) 선박의 반환 여부를 논의한 ‘선박 문제’, 재일동포들의 일본 내 법적지위 문제를 논의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평화선과 어업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한 ‘어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한일 양국은 다양한 의제들과 수없이 많은 회의, 13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한일회담에 쏟아부으며 마침내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부

속 협정을 체결했다. 오랜 한일회담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후 한일 양국은 해당 조약과 부속 협정을 기반으로 한 '65년 체제'라고 불리는, 작금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틀 속에서 60년을 함께 걸어왔다.

이와 같이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65년 체제'를 잉태한 한일회담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도 높아져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특히 2005년과 2007년에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는 한일회담 연구의 기폭제가 되어 이전보다 더 실증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일 관계 연구에 있어서 한일회담 연구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이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일회담 연구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한국 외교사, 일본 외교사, 한일 관계 연구, 크게는 동북아시아 외교 연구, 냉전 연구, 탈식민지 연구에도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한일회담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독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대응과 정책 수립 등 사회적 기여도 해 왔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 이와 같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한일회담 연구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2025년까지 약 2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

한일회담 연구사를 정리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최희식의 연구(2016)를 들 수 있다. 그는 '한일 외교문서 공개와 자료의 집대성', '개별 연구 동향'을 통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일회담 연구사를 정리·검토했다. 그 결과, 한일회담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이전보다 실증적인 연구의 증가, 질적 수준의 향상, 연구 영역의 확장이라는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이후부터 2016년 상반기까

지 진행된 한일회담 연구의 특징을 밝히고, 한일회담 연구사를 본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논문 작성 시기상 2016년 이후의 시기가 빠져있고, 그로 인해 2005년~2016년 시기와 그 이후의 연구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는 검토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진 한일회담 연구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크게 2005년까지, 2006년~2015년, 2016~2025년으로 나누고 각 시기의 특징 등을 살펴보면서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회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궤적을 정리·검토해 본다.<sup>1)</sup>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 한일회담 연구의 초석을 다진 시기라고 볼 수 있는 2005년까지의 주요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연구자료집 출간’, ‘주요 연구 동향 및 특징’, ‘연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일회담 연구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2016년~2025년을 대상으로 ‘연구자료집 출간’, ‘주요 연구 동향 및 특징’, ‘한일회담 연구의 축소’를 중심으로 한일회담 연구를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요약한 후 향후 한일회담 연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 II. 한일회담 연구의 태동화: 2005년까지의 시기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5년과 2007년에 한일 양국이 각각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고, 이를 계기로 한일회담 연구는 2006년 이후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 이전에도 한일회담 관련 연구가 진행되

---

1) 한일회담 연구는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한일회담 관련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일본의 주요 연구 성과들도 부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었는데, 한일회담 연구의 초석을 다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원덕, 오타 오사무(太田修),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寿)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이원덕(1996)은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 회담』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한일회담의 불완전한 타결에 있다고 보고, 이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의 시점에서 분석했다. 한일회담이 진행된 요시다(吉田) 내각, 기시(岸) 내각, 이케다(池田) 내각, 사토(佐藤) 내각 시기의 한일회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을 검토하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원래의 목적보다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중시하여 한일회담이 왜곡된 채 타결되었고, 그로 인해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 이슈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논했다.

오타(2003)는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에서 냉전, 내셔널리즘, 피해자의 권리라는 ‘한국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미군정기부터 박정희 정권기까지 정부·국회·언론·지식인·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인식과 행동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을 분석했다. 이승만 정권은 회담 초기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지배 청산을 내걸었지만, 이후 국내 정치·경제 상황의 위기와 냉전 완화로 인해 한국 전쟁 휴전 이후부터 ‘방일’(防日) 내셔널리즘으로 대일 정책을 변화시켰으며, 장면 정권은 일본 자본 도입을 축으로 한 ‘한일경제협조’ 노선을 추구했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청구권 문제를 타결하고자 했다고 논했다.

요시자와(2005)는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에서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과제가 남겨진 한일 관계를 ‘전후 한일 관계’로 규정하고, 한일회담 시기를 원칙적 대립(1945~1953), 인도 외교(1954~1960), 경제 기조(1960~1965) 시기로 나누어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을 검

토했다. 분석 결과, 한일 양국의 주요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타결하려는 이른바 ‘경제 기조’에 의해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주요 의제들이 식민지 지배 청산이라는 의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채 타결되었고, 이로 인해 ‘전후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논했다.<sup>2)</sup>

이 외에도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1996)는 발간 당시 활용할 수 있는 한일회담 관련 자료들을 망라하여 주요 의제들의 교섭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일회담을 통사적으로 검토했고, 이종원(李鐘元, 1996 외)은 당시 미국의 대한 정책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이 한일 회담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논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회담을 분석하면서 한일회담 연구의 초석을 다졌고, 지금도 한일회담 연구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연구에서 참고하고 있는 주요 문헌이 되었다.<sup>3)</sup>

- 
- 2) 오타 교수와 요시자와 교수는 한일회담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 성과를 낸 저명한 연구자일 뿐만이 아니라 후술하는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 문서 공개에 관해서도 정력적으로 활동하면서 학문적·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오타 교수와 요시자와 교수의 연구서는 각각 2008년과 2019년에 한국어로 번역·출판되었다.
  - 3) 이 시기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 외교문서를 수집한 이도성의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5·16에서 조인까지』(1995), 한국 정부의 『韓日會談白書』(1965)와 같은 자료, 그리고 한일회담에 참가한 김동조(1986), 배의환(1992), 유진오(1993), 김용식(1994) 등의 회고록이 주요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 Ⅲ. 한일회담 연구의 활성화: 2006년~2015년 시기

#### 1.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2005년 8월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05년 1월에 청구권 문제 관련 외교문서 5권이 공개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나머지 외교문서를 검토한 후 같은 해 8월 총 156권, 35,000여 장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했다.<sup>4)</sup> 한국외교문서에는 한일 양국의 교섭 관련 회의록을 비롯하여 내부 회의 자료, 합의문안·협정안·조약안 등 당시 한국 정부의 한일회담 방침과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한일회담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 정부도 2007년에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60,000여 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한회담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의 노력이 컸다.<sup>5)</sup> 이후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검토 작업을 거쳐 전면 공개·부분 공개·비공개로 해당 외교문서들을

4)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넷 홈페이지(<http://contents.nahf.or.kr/>)의 사료 라이브러리에서 공개하고 있다.

5) 오타 오사무 교수, 다나카 히토시(田中宏)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 등을 대표로 2005년 12월 18일에 동 모임을 결성했다. 이와 같은 연구자 및 이양수 등 한일 시민들이 모여 “일본 정부에 대해, 일한회담 관련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실과 책임을 인정시키며,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한국·조선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다. 외무성은 동 모임의 요청에 따라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으며, 해당 외교문서들은 동 모임의 홈페이지(<http://www.f8.wx301.smilestart.ne.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모임은 2016년 12월 23일에 해산하고, 현재 ‘일한회담 문서 등 관리 위원회’(日韓會談文書等管理委員會)를 결성했다. 이 모임의 활동은 한일회담, 한일 관계 연구에 학문적 공헌뿐만 아니라, 한일 시민사회 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다. 이 자리를 빌려 동 모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공개하면서 그 수는 80,000여 장을 넘는다. 일본외교문서 또한 교섭 관련 회의록, 부처들 간의 내부 회의 자료, 방침, 미국과의 논의 자료 등 당시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준비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한일 양국에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한일회담은 학문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기본관계문제, 청구권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선박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 어업 문제에 관한 교섭 회의록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어 해당 교섭 과정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일 양국의 내부 회의 자료 및 미국과의 협의 자료들도 포함하고 있어 주요 의제 교섭 과정과 함께 한일회담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는 한일회담 연구의 발전에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6)</sup>

## 2. 연구자료집 출간

이와 같이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2005년부터 한일 양국에서 각각 공개되면서 학문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고, 실증적이고 보다 면밀한 한일회담 연구가 가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100,000장이 넘는 방대한 양이라는 점, 원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읽기 힘든 필기체로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외교문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

6) 이와 함께 강제동원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독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역사인식문제가 한일회담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일회담을 재검토함으로써 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바로 연구자료집 출간이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를 필두로 방대한 양의 외교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자료집들이 다수 발간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한일회담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데에 연구자료집 또한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7)</sup>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연구자료집 발간에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동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방대한 양의 외교문서를 수집·정리·해제하는 작업을 수년 동안 진행하면서 한일회담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외교문서를 정리한 『한일회담 해제집 I~V』(2008)를 들 수 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는 한국외교문서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 해독이 어려운 문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난해한 문서의 분류체계에 의한 회담 시기별·의제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 연구자와 대중들이 한국외교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제 작업을 진행했다.<sup>8)</sup> 해제 작업은 제목, 문서 종류, 내용, 첨부문서, 중요도 등 14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제1권: 예비회담~5차 회담’, ‘제2권: 평화선·북송·6차 회담(예비교섭·청구권)’, ‘제3권: 5차 회담’, ‘제4권: 고위 정치회담 및 7차 회담(법적지위·어업관계·문화재)’, ‘제5권: 7차 회담(기본관계·청구권·협정체결)’ 총 다섯 권의 해제집이 탄생했다.

---

7)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일 연구자 네트워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공개된 한국과 일본 외교 문서의 수집, 정리, 목록화, 해제, 번역작업을 실시하며 한일협정 연구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한일협정에 대한 연구가 질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최희식, 『한일협정 연구-회고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제53호, 2015, p.230.

8)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 동북아역사재단, 2008, p.6.

이 해제집은 한일회담 연구의 참고문헌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수의 한일회담 연구가 이 해제집을 참고하고 있으며, 일본외교문서 정리 작업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외교문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Ⅲ장에서 설명하는 『한국외교문서』와 함께 사용할 경우 한국외교문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이 국민대 일본학연구소가 발간한 『한일회담 해제집 I~V』은 한일회담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9)</sup>

이 밖에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2010), 『독도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1952~1969) 1~6』(2011), 『독도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1952~1969) 해제집』(2011)과 같은 연구자료집도 출간되면서 한일회담 연구 활성화에 일조했다.<sup>10)</sup>

### 3. 주요 연구 동향 및 특징

전술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와 연구자료집 발간은 2006년 이후 10여 년 동안 한일회담 연구 성과를 크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한일회담 연구사의 전성기라고 불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 내용의 정치화(精緻化), 연구 주제의 다양화, 연구 결과의 심화 등 양적인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한일회담 연구가 크게 발전했다.

9) 이 연구 성과는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표우수성과, 2012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기초학문육성 10년 대표 성과로 선정되면서 그 학문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동 연구소는 국민대학교에서 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에 교내 최우수 연구소 및 2009년과 2011년에 우수 연구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10) 한편 일본에서도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 이동준(李東俊) 교수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수집·정리하여 『日韓外交正常化關係資料』 시리즈를 출간했다. 2006년~2015년에는 시리즈 중 6개의 연구자료집이 출간되었고, 나머지 2개의 자료집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출간되었다.

이 시기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활용한 주요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크게 한일회담 주요 의제 관련 박사논문 집필 및 단독 연구서 출간, 연구 주제의 다양화, 연구 논문을 집대성한 연구서 발간을 들 수가 있다.

첫째,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들을 분석한 박사논문 집필과 단독 연구서 출간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박진, 조운수, 이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장박진(2009)은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한일회담이라는 역설』에서 기본관계문제와 청구권 문제를 검토하면서 한일회담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고찰했다. 분석 결과, 한일회담 진행 당시 한국은 과거사 청산보다 미소 대립으로 인한 냉전 및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해 반공안보라는 국가수호 과제를 더 중시했고, 역설적으로 반공을 위해 과거사 청산을 ‘소멸’시켰다고 논했다. 선행연구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한일회담의 목적이 냉전과 경제 논리로 인해 왜곡된 채 타결되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논했는데, 장박진의 연구는 ‘한국이 과거사 청산을 소멸시켰다’는 과감한 논의를 펼치면서 한일회담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운수(2007)는 어업 문제를 주제로 「日韓漁業交渉の国際政治—海洋秩序の脱植民地化と‘国益’の調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이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처음으로 어업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한국이 평화선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회담 초기에는 ‘해양 질서의 탈식민화’를 ‘국익’으로 간주했다가 서서히 ‘국익’을 ‘실리’로 조정하면서 어업 문제를 타결했다는 점, 어업 문제 교섭이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밝혔다. 본 연구는 한일회담에서 이승만의 반일 정책, 박정희의 친일 정책, 미국의 개입이 중요했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어업 문제를 통해 ‘국익의 조정’이라는 관점에

서 한일회담을 새롭게 바라보며 한일회담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일조했다.

이성(2013)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를 주제로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1951-1965년)」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이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활용하여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의 교섭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룬 첫 박사논문으로 영주권 문제, 강제퇴거 문제, 국적확정 문제, 귀화 문제를 중심으로 교섭 과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국적선택권에 대해 이승만 정권의 기민적인 발상이 있었다는 점, 교섭 후반기 당시 외무성이 귀화 정책을 이끌었다는 점, ‘일본인화’를 통한 재일한국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시도가 교섭 내내 존재했다는 점 등을 밝혔다. 선행연구의 과제였던 한일 양국의 동 문제에 대한 교섭 방침과 전략을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북한과 민단이 교섭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 교섭의 전체상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 문제 연구의 깊이를 한층 심화시켰다.<sup>11)</sup>

둘째, 문화재 반환 문제, 선박 문제와 같이 그동안 한일회담 연구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면서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문화재 반환 문제와 선박 문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두 문제는 기본관계문제나 청구권 문제와 같이 한일회담의 행방을 좌지우지하는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 주제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선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문제이고 현재 한일 양국의 외교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연

---

11) 이밖에 박진희(2008)는 이승만 정권기의 한일회담을 ‘제1공화국 수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시기’, ‘예비회담 개최~제3차 회담 결렬 시기’, ‘제3차 회담 결렬 이후~제4차 회담 재개 시기’, ‘제4차 한일회담 재개 이후~제1공화국 붕괴 시기’로 나누고 이승만 정권의 대일 정책을 중심으로 한일회담을 분석했다.

구 상황에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이를 활용한 문화재 반환 문제, 선박 문제 관련 연구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인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로 국성하(2005)와 류미나(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국성하는 제1차 회담~제3차 회담, 제4차 회담~제6차 회담, 제7차 회담으로 나누어 동 문제 교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동 교섭은 성공적이지 않았고 한일회담의 소모품이었다고 지적했다.<sup>12)</sup> 다음으로 류미나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일본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한일 양국의 교섭상의 대립이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한일 양국의 대립이었다기 보다는 교섭을 담당하는 외무성과 문화재 반환을 반대하는 문화재보호위원회 간의 대립과 마찰로 인한 것이라고 논했다.

이밖에 박훈(2010)은 한국의외교문서를 활용하여 문화재 반환 문제를 고찰했고, 제성호(2012)와 이근관(2014)은 국제법 시각에서 중심으로 동 문제를 분석했다.

선박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남기정(2010)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이 연구는 제1차 회담의 선박분과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선박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그 교섭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박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청구권 문제에 선박 문제를 포함시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선박 문제가 청구권 문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논했다. 이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선박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첫 연구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선박 문제를 다룸

---

12) 국성하(2005)는 처음으로 한국의외교문서를 활용하여 문화재 반환 문제를 연구했다. 공개된 한국의외교문서를 활용했다는 점, 연구 논문 게재 시기가 2005년 12월이라는 점에서 2006년~2015년 시기의 연구에 포함했다.

으로써 한일회담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이끌었다.<sup>13)</sup>

셋째, 한일회담의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한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의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2』(2010),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V』(2012, 2014, 2015)를 들 수가 있다.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2』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사업의 연구 성과로 ‘한일회담과 국제사회’, ‘의제로 본 한일회담’ 두 편으로 나누어 총 25편의 연구 논문을 집대성했다.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 관련 연구들을 비롯하여 한일회담 시기의 국제관계, 일본 국내 정치, 역사인식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망라하고 있다.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V』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에 대한 국제법적인 검토를 비롯하여 식민지 지배 책임, 배상 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동원문제 등 한일회담 및 한일회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총 30편의 연구 논문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상기 연구서는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활용한 본격적인 연구서로 한일회담 및 그와 관련된 한일 관계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4)</sup>

이와 같이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된 한일회담 연구는 회담 참가자들의 회고록이나 단편적인 비공개 외교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에

---

13) 이와 함께 남기정(2008), 조운수(2008), 장박진(2009), 최희식(2009), 김영미(2010), 長澤(2011) 등의 연구들도 한일회담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한일회담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이끌었다.

14) 한편 일본에서도 한일회담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이종원 교수,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교수, 아사노 도요미 교수를 중심으로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I~II』(2011)를 출간했다.

서 벗어나 공개된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한일회담을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질적·양적으로 큰 연구 성과를 거뒀다.

#### 4. 연구 지원 사업

2006년~2015년 시기의 한일회담 연구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 공개를 시작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자료집 출간을 통해 크게 발전했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발전에는 한국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공기관의 대형 연구 지원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중점연구소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9년 동안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에 연구 지원을 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는 ‘제1단계: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기초 사료연구’, ‘제2단계: 한일회담 이후 한일관계 관련 외교문서 및 기초자료의 수집·발간·연구’, ‘제3단계: 한일회담 이전 시기(1945-1951) 한일관계 자료의 수집·발간·연구’를 진행했고, 『한일회담 해제집 I~V』,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2』,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GHQ 시대 한일 관계의 재조명』과 같은 한일회담 연구의 폭과 깊이를 한층 심화시킨 연구 성과를 생산했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2009년부터 여러 해 동안 일본외교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제하는 연구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외교문서 정리 작업을 통해 제1단계 사업에서 2007년부터 공개된 60,000여 장, 제2단계 사업에서는 추가 공개된 20,000여 장의 일본외교문서를 대상으로 상세목록집과 해제집 등을 작성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 주요 문서들의 해제집 작성<sup>15)</sup> 및 『한일회담 일

---

15) 해당 연구 성과는 2022년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 목록집 I~V』으로 출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Ⅳ장 참조.

본외교문서』(2010),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1952~1969) 1~6』(2011),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1952~1969) 해제집』(2011) 등의 연구자료집,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2013)과 같은 연구서를 발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대형 연구 지원 사업이 있었기에 한일회담 연구가 한층 진일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6)</sup>

## IV. 한일회담 연구의 사양화: 2016년~2025년 시기

### 1. 연구자료집 출간

이 시기에 출간된 한일회담 관련 연구자료집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편찬한 『한일회담 자료 총서』 시리즈가 있다. 이 연구자료집은 2025년 10월 현재 『한국외교문서 1~10』 10권과 『한일회담 상세목록집 I~V』 5권, 그리고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I~Ⅲ』 3권 총 1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자료집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첫째, 『한국외교문서』는 한국외교문서를 대상으로 ‘제1권: 대일배상요구 조서’부터 ‘제10권: 제7차 한일회담 2’까지 발행되었다. 이 연구자료집은 방대한 분량과 가독성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 힘들었던 한국외교문서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연구자료집

---

16) 이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4년에 ‘한일국교정상화 연구’라는 연구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연구 성과물로 『한일국교정상화 연구』(2016)가 출간되었다.

은 한국외교사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구 지평의 확대, 과거사 문제의 이해와 대일 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 향후 북일 회담에 대한 시사점 제공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7)</sup>

둘째,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 I ~ V』은 2007년 이후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문서명, 작성연월일, 세부 항목, 작성처, 비밀 등급, 주요 내용 등을 번역·수록하고 있다. 주요 의제들을 교섭 과정을 비롯하여 한일회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외교문서는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한 인식, 부처 간 내부 논의, 방침 등은 물론이고 한국외교문서에는 없는 교섭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한일회담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자료이다. 하지만 그 양은 한국외교문서보다 방대하고, 일본어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었다. 동 목록집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외교문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조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8)</sup>

셋째,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I ~ III』은 한일회담 당시 청구권 문제 교섭에 관여하고 있었던 대장성(大藏省)이 작성한 비공개 자료들을 번역·수록한 연구자료집이다. 대장성은 1963년 6월에 청구권 문제 교섭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는 계속 비공개 상태였다가 2014년에 공개되었다. 이 자료들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들의 내부 검토 자료, 내부 회의 자료, 과거사 처리를 위한 다른 국가들의 실제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19)</sup> 이는 당시 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교섭 방침을 파악할

17)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회담 자료총서 2. 한국외교문서 예비회담~제3차 한일회담』, 2021, p.8.

18)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회담 자료총서 11.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 I-에비회담~제3차 회담』, 2021, p.8.

19)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회담 자료총서 16.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I』, 2021, p.8.

수 있는 자료들로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주요 연구 동향 및 특징

이 시기의 주요 연구 동향을 검토해 보면 한일회담 주요 의제 관련 단독 연구서 발간,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의 활성화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를 주제로 한 단독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이는 2006년~2015년의 특징과 비슷하며 대표적인 연구로 유의상과 金恩貞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이 연구들은 청구권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서 한일회담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유의상(2016)은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에서 현재의 당위론적 시각이 아닌 한일회담 진행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서 해석하는 ‘역사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의 대일배상요구부터 한일회담 타결 때까지의 청구권 문제 교섭을 시계열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청구권 협정이 불완전하고 비판받을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 외교사 및 대일외교사에서 가치가 있는 외교적 성과물이자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청구권 협정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청구권 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이 연구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청구권 문제에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다.

金恩貞(2018)은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政治史』에서 일본의 청구권 문제 관련 정책에 대해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국내 정치 과정을 통해 검토하면서 청구권 문제가 경제협력 방식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역청구권 주장 및 한일 간 청구권의 상쇄→상호포기+ $\alpha$ →역

청구권 주장 철회→경제협력 방식'으로 일본의 청구권 문제 관련 정책이 변화한 것은 외무성을 비롯한 정부 부처 간의 대립과 협력 속에서 도출된 것이며 외무성의 일관된 전략이 관철된 것이었다고 논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정치가들의 정치적 결단이나 미국의 압력이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논했지만, 이 연구는 일본 국내 정치 과정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했다.

둘째,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05년 한국의외교문서 공개 이후 류미나가 동 문제 연구의 초석을 다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동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 박사논문, 연구서가 나오면서 그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연구로 류미나와 엄태봉의 연구를 들 수가 있다.<sup>20)</sup>

먼저 류미나는 2010년 전후의 연구에 이어 동 문제 교섭에 관여한 일본의 관료와 학자에 관한 연구(2017),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한일 양국 사회의 인식에 관한 연구(2019)를 발표했다. 특히 전자는 인물사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가 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관련 인물들의 동 문제 교섭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 등을 분석하여 연구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의 정치학: 현대 한일관계의 기원』(2025)이라는 연구서를 출간했다.<sup>21)</sup> 이 연구서는 그동안 그가 진행해 온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20) 한편 조운수(2016)와 현대승(2016)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활용하여 문화재 반환 문제와 선박 문제를 연구 주제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21) 이 연구서는 류미나 교수의 유작이다. 그가 피안(彼岸)으로 떠난 후 이성시 교수(와세다대), 김효숙 교수(세종대), 허지은 교수(서강대), 마쓰이 다카시(松井隆志, 도쿄대) 교수가 그의 유고를 정리하여 출간했다. 이 자리를 빌려 피안으로 떠난 류미나 교수의 명복을 빌고, 연구서 출간을 위해 힘쓴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조선총독부, 일본인 학자들의 조선 유물·유적에 관한 인식과 정책,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북일국교정상화 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 등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동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이다.

다음으로 엄태봉은 박사학위 논문과 연구 논문, 연구서 등 다수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日韓文化財問題の構造と限界-1951~1965年」(2017)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단독 주제로 다룬 첫 박사학위 논문이며, 이후 그는 동 문제를 재평가하는 연구(2019), 한일회담에 비추어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을 전망하는 연구(2019), 2010년에 체결된 한일 도서 협정을 비교·분석한 연구(2019) 등 다양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가필·수정하여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2024)라는 연구서를 출간했다. 그의 연구는 한일회담 당시 ‘인도’라는 문화재 반환 방식은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이를 계속 거부하는 일본 측을 한국 측이 설득했다는 점, 회담 중단기에 합의된 구두전달사항은 이후 동 문제 교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라는 분석틀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일회담 연구에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한일회담 연구의 축소

2016년~2025년 시기의 한일회담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독 연구서 출간,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 활성화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지만, 2006년~2015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한

일회담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연구자료집 출간, 공공기관의 활발한 연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한일회담 연구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연구 지원 측면에서도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한일회담은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한일회담 관련 대형 연구 지원 사업이 이전 시기에 비하면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이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일본외교문서 정리사업(1단계)은 각각 한국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대형 연구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대형 연구 프로젝트였다. 이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물이 생산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후 이와 같은 한일회담 관련 대형 연구 프로젝트는 동북아역사재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에 지원한 일본외교문서 정리 사업(2단계)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2020년 이후에는 연구자료집 작성을 위한 개인 연구 프로젝트 정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을 주제로 한 연구서 발간 및 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V』,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1~2』와 같이 한일회담을 주제로 한 연구서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2025년에 이와 같이 한일회담을 주제로 한 종합적인 연구나 이를 엮어 연구서로 편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sup>22)</sup>

한편 연구 성과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

---

22) 2025년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전과 같이 한일회담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고, 한일 관계 전반을 다루고 있다.

고 있다. 이전 시기는 청구권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 어업 문제 등 주요 의제를 다룬 박사논문이나 단독 연구서가 다수 등장했지만, 2016년~2025년 시기는 그에 비해 줄어들었다. 연구 논문 또한 이전 시기는 한일 회담의 주요 의제를 비롯하여 여러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속속 나타났지만, 2016년~2025년 시기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경향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일회담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서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외교문서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한일협정과 한일관계』(2018)와 동 재단의 자체 학술회의 성과를 엮은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V-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2016)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전 시기에 비해 2016년~2025년 시기는 연구 지원과 연구 성과 측면에서 모두 한일회담 연구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와 학계, 한국 사회의 한일회담에 대한 관심 저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연구가 상당수 진척되면서 한일회담의 주요 연구는 대부분 진행되었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 한일회담이라는 과거의 한일 양국의 외교적 이슈 보다 경제 안보, 기후 변동, 인도-태평양 전략 등 현재의 외교적 이슈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감소도 한일회담 연구의 축소로 이어졌다. 여러 해 동안 실시된 대형 연구 지원 사업이 줄어들면서 한일회담 관련 연구의 지속성과 동력이 약해지며, 이전과 같은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즉 한일회담에 대한 관심 저하 및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감소가 한일회담의 연구 성과가 감소하는 사양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는 한일 양국이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한 이후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일회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연구사의 궤적을 정리·검토했다. 이하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향후 한일회담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갈음한다.

### 1. 한일회담 연구 평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 연구자료집 출간,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사업이 한일회담 연구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한일회담 연구는 연구 내용의 정치화(精緻化), 연구 주제의 다양화, 연구 결과의 심화 측면에서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자료집 또한 100,000여 장이 넘는 범접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외교문서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한일회담 연구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연구 지원 사업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성과를 생산해 냈다는 측면에서 한일회담 연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 이전에는 회담 참가자의 회고록이나 단편적인 비공개 외교문서 수집을 통해 한일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교섭 과정 등 한일회담의 전모를 정확하고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추측성 견해나 사실과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 하지만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 특히 2006년~2015년 시기의 한일회담 연구는 외교문서를

활용하면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 실증성과 정치성(精緻性)이 더해졌고, 주요 의제들의 교섭 과정이나 한일 양국 내부의 논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와전(訛傳)되었던 추측성 의견들을 바로잡고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면서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문화재 반환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와 같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주요 의제들도 한일 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박사논문, 연구 논문, 연구서 출간 등 본격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문화재 반환 문제의 경우는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는 등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일한 연구 주제를 다루는 선행 연구의 결론과는 결이 다른 새롭고 과감한 해석을 제시하는 연구도 늘어나면서 연구 결과가 심화되었다.

이 시기의 한일회담 연구사는 한일회담이라는 대지(大地) 위에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연구자료집과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햇빛과 물이 공급되면서 한일회담의 연구 성과라는 꽃이 만개했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6년~2025년 시기의 한일회담 연구는 2006년~2015년 시기에 비해 연구 성과나 연구 지원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면서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요인으로 한일회담 연구에 대한 관심 저하와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감소를 들 수 있다.

## 2. 한일회담 연구 제언

향후 한일회담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주제들에 대해 독특한 관점이나 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대부분 공개되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연구는 비공개 중인 일

본외교문서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 한 나오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비교사적 연구나 국제정치학 이론 등을 통해 한일회담을 새롭게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일회담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 공개 외교문서 중 지금까지 번역·출간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정리한 연구자료집들이 많지만, 일본외교문서 중에는 아직까지 번역·출간되지 않은 자료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외교문서 중에는 한일회담에 참가했던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회고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직 번역·출판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한일회담 연구는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사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 정부가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외교문서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 2007년 3월 이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60,000여 장 중 전면 공개문서 1,369건, 부분 공개문서 524건, 비공개 문서 23건이 있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전면 공개 소송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새로운 문서를 공개하거나 부분 공개·비공개 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80,000여 장이 넘는 일본외교문서가 공개되었다. 아직까지 전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외교문서가 모두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증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사업 필요하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한국연구재단이나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연구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했다. 그 결과, 『한일회담 해제집 I~V』,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2』과 같이 연구 논문, 연구서, 연구자료집 등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온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자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Ⅳ』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일회담 관련 대형 연구 지원 사업은 2018년을 즈음하여 그 명맥이 흐려졌다. 특히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회담을 주제로 한 연구 지원 사업도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이 느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공기관들이 한일회담에 관심을 갖고 연구 지원 사업을 좀 더 실시한다면 2006년~2015년만큼은 아니더라도 한일회담 연구가 어느 정도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다.

한일회담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연구자료집 출간,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사업이 더해져 2015년 즈음까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한일회담에 대한 관심 저하, 한일회담 연구 지원 사업의 감소로 인해 사양화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일회담은 작게는 한국 외교와 한일 관계 연구, 크게는 동북아시아 냉전 및 탈식민지 연구에 기여하는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의 생산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아직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회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살아난다면 한일회담 연구가 사양화의 길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70주년이 되는 2035년에는 한일회담 연구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있기를 기대해 본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5년 10월 29일

논문 심사일 : 2025년 11월 9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12월 12일

## 참고문헌

### 1. 연구 논문

-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2005.
- 김영미, 「초기 한일회담에서 지식인 관료의 역할과 정체성-예비~3차 회담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100호, 2010.
- 남기정, 「한일 선박 반환교섭에 관한 연구-1차 회담 선박분과위원회 교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2010.
- \_\_\_\_\_, 「한일회담시기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 인식-어업 및 평화선을 둘러싼 국제법 논쟁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제10호, 2008.
- 류미나,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간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집, 2009.
- \_\_\_\_\_,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인물 연구-일본측 문화재 반환 교섭 담당자들과 일본의 조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63호, 2017.
- \_\_\_\_\_, 「문화재 반환 문제로 본 한일 간 '화해'의 가능성-한일 간 국교정상화 과정에 대한 재고-」, 『한일관계사연구』 제66집, 2019.
- 박 훈,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교섭의 전개 과정과 쟁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2010.
- 엄태봉,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제26권, 2019.
- \_\_\_\_\_,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62권, 2019.

- 엄태봉, 「간담화, 한일도서협정과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동북아연구』 제34권, 2019.
- 이근관, 「한일 문화재협정과 식민지시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재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일제식민지 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2014.
- 제성호, 「한일문화재협정의 국제법적 검토」,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2014.
- 장박진, 「초기 한일회담(예비~제3차)에서의 재일한국인 문제의 교섭과정 분석: 한일 양국의 교섭목표와 전후 '재일성'(在日性) 형성의 논리」,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2호, 2009.
- 조윤수,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제28호, 2008.
- \_\_\_\_\_,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51호, 2016.
- 최희식, 「한일회담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한국 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국가전략』 제15권 4호, 2009.
- \_\_\_\_\_, 「한일협정 연구-회고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제53호, 2015.
- 현대송, 「한일회담에서의 선박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제1호, 2016.
- 長澤裕子, 「日韓會談と韓国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請求権問題からの分離と文化財協定c」, 李鐘元·木宮正史·淺野豊美編著,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 2. 연구서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1: 한일 회담과 국제사회』, 선인, 2010.

\_\_\_\_\_,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2010.

다카사키 소지 저·김영진 역,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1998.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 점에 대한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2.

\_\_\_\_\_,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2.

\_\_\_\_\_,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I -일제식민지 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4.

\_\_\_\_\_,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V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2015.

\_\_\_\_\_,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V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6.

류미나, 『문화재의 정치학: 현대 한일관계의 기원』, 서강대학교 출판부, 2025.

박진희, 『한일회담-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 과정』, 선인, 2008.

엄태봉,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 경인문화사, 2024.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2016.

- 오타 오사무 저·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한일교섭-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2008.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이원덕 외,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3.
- \_\_\_\_\_, 『한일국교정상화 연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 요시자와 후미토시 저·이현주 역,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 일조각, 2019.
-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2009.
-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関係』, 東京大学出版会, 1996.
- 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著,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 \_\_\_\_\_,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 太田修,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2003.
- 金恩貞,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政治史』, 千倉書房, 2018.
- 高崎宗司, 『検証日韓国国会談』, 岩波書店, 1996.
-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る』, クレイン, 2005.

### 3. 학위논문

- 이 성,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1951-196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嚴泰奉, 「日韓文化財問題の構造と限界-1951~1965年」, 東北大学法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17.

チョウ・ユンス, 「日韓漁業交渉の国際政治-海洋秩序の脱植民地化と‘国益’  
の調整-」, 東北大学法学研究科博士学位論文, 2007.

#### 4. 연구자료집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V』, 동북아역사  
재단, 2008.

\_\_\_\_\_,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선인, 2010.

大韓民国政府, 『韓日會談白書』, 1965.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회담 자료총서 1~18』, 2021~2025.

\_\_\_\_\_, 『독도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1952~1969) 1~6』, 2011.

\_\_\_\_\_, 『독도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1952~1969) 해제집』, 2011.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5·16에서 조인까지』, 寒松, 1995.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集, 『日韓国交正常化關係資料 第I期  
1945~1953年(全9卷)』, 現代史料出版, 2010.

\_\_\_\_\_, 『日韓国交正常化關係資料 基礎資料編(全  
11卷)』, 現代史料出版, 2011.

\_\_\_\_\_,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II期 1953  
年~1961年 [韓国側資料](全5卷)』, 現代史料出版, 2011.

\_\_\_\_\_, 『日韓国交正常化關係資料 第II期 1953  
~1961年 [日本側史料] (全7卷)』, 現代史料出版, 2012.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長澤裕子編集, 『日韓国交正常化關係資料 第III

期 1961~1962年 [日本側史料](全5卷)], 現代史料出版, 2013.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編集, 『日韓国交正常化関係資料 第Ⅳ期  
1963~1965年 [日本側史料](全11卷)], 現代史料出版, 2015.  
浅野豊美·吉澤文寿·長澤裕子·金鉉洙編集,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第Ⅲ  
期 1961年~1962年 [韓国側資料](全4卷)], 現代史料出版, 2018.  
浅野豊美·吉澤文寿·長澤裕子·金鉉洙·薦田真由美編集, 『日韓国交正常化問  
題資料 第Ⅳ期 1963年~1965年 [韓国側資料](全5卷)], 現代史料出  
版, 2020.

## 5. 그 외

김동조, 『회상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86.  
김용식, 『새벽의 약속—김용식 외교 33년』, 김영사, 1994.  
배의환, 『보리고개는 넘었지만—배의환 회고록』, 1992, 코리아헤럴드.  
유진오, 『韓日會談 -第1次會談을 回顧하면서-』, 外務部外交安保研究院,  
1993.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ホームページ, [http://www.f8.wx301.  
smilestart.ne.jp/](http://www.f8.wx301.smilestart.ne.jp/)

Abstract

## How has Research on the Korea-Japan talks progressed?

- The Trajectory of Studies on the Korea-Japan Talks:  
Focusing on Research from 2006 to 2025

Um, Tae B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summarize the history of research on the Korea-Japan Talks, focusing on the period from 2006 to 2025,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diplomatic documents related to the Korea-Japan Talks.

First, the period from 2006 to 2015 saw significant revitalization in research. This was driven by the release of diplomatic documents, the publication of research compilations, and research support programs. These factors led to greater empirical grounding in research content,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and deeper research outcomes.

Second, the period from 2016 to 2025 showed a tendency toward reduced research output and support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leading to a decline.

To revitalize future research on the Korea-Japan Talk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analytical frameworks, conduct studies on Japanese government documents that have not yet been translated, promote the full disclosure of Japan's diplomatic records, and strengthen research support programs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Keywords

Korea-Japan Talks, History of Research, 6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Diplomatic Documents on the Korea-Japan Talks